KIEP
세계경제 포커스
World Economy Focus

1990-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2020년 1월 23일 Vol. 3 No. 4 ISSN 2635-5981

2020년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

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(crkim@kiep.go.kr, Tel: 044-414-1124)

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
T.044-414-1114 F.044-414-1001 • www.kiep.go.kr

차 례

1. 서론
2. 2020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
3. 시사점

주요 내용

▶ 2020년 1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발표함.

- 2020년 연두교서는 정치적으로는 개헌 제안에 초점이 맞춰졌으며, 사회·복지 이슈와 관련해서 출산 장려를 비롯한 보육, 교육, 의료 등 가족 지원과 삶의 질 개선에 강조점을 두었음.

▶ 정치 부문에서는 개헌이 제안되었는데, 푸틴 대통령의 권력 이양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- 푸틴 대통령이 △국무위원회 격상 △상·하원 역할 강화 △대통령 후보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제안한 것은 임기 만료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됨.
- 푸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2021년 총선, 2024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연두교서에서 국내 사회 및 경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임.

▶ 2020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개헌 문제를 언급함과 동시에 △경제 △사회 △복지 부문의 내용이 강조되었다는 데 주요한 특징이 있음.

- 경제 부문의 주요 이슈는 사업환경 개선과 혁신기술의 도입이며, 푸틴 대통령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연방의회(두마)에서 논의 중인 「투자촉진법」의 중요성을 강조함.
- 사회 부문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시행 중인 △교육 △의료 △환경 국가프로그램 진행상황을 검토하고, 2020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를 강조함.
- 복지 부문은 출산 장려와 국민소득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으며, △출산지원금 △보육환경 △저소득층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함.

▶ 한국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사회·복지 이슈를 강조한 점과 2020년 한·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점을 활용해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 분야 및 신사업을 발굴하고, 양국간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이번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국가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요청한 점을 감안할 때, 한·러 지방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의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, 첨단기술, 빅사이언스, 디지털경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전문가간 교류를 강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해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.
- 러시아 정부는 의료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바, 한국은 첨단의료기술과 더불어 의료서비스, 진료기록 전산화 등의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에 협력사업을 제안해볼 수 있음.

1. 서론

■ 2020년 1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발표함.[1)]

- 2020년 연두교서는 정치적으로는 개헌 제안에 초점이 맞춰졌으며, 사회·복지 이슈와 관련해서 출산 장려를 비롯한 보육, 교육, 의료 등 가족 지원과 삶의 질 개선에 강조점을 두었음.

○ 2019년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은 사회·복지와 경제 부문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면서 국가프로그램을 제시했던 반면, 이번 연두교서에서는 국가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음.[2)]

- 이번 연두교서 발표 직후 메드베데프 총리 내각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음.[3)]

○ 당사자 중 예상치 못한 내각 사퇴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사람도 있었음.[4)]

○ 2020년 1월 21일 발표된 새로운 내각 구성에서 제1부총리를 포함해 부총리 9명 중 5명이 교체되었으며, 12명의 장관이 유임되고 9명은 교체되었음(부록 표 참고).[5)]

○ 메드베데프 前 총리는 국가안보위원회 부의장직을 제안 받았는데, 부의장직은 푸틴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前 총리를 위해 신설한 직책임.[6)]

■ 2020년도 러시아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은 △정치 △경제 △사회 △복지 부문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으며, 개헌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임.

- 정치 부문에서는 개헌이 제안되었는데, 푸틴 대통령의 권력 이양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[7)]
- 경제 부문의 주요 이슈는 사업환경 개선과 혁신기술의 도입이며, 푸틴 대통령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연방의회(두마)에서 논의 중인 「투자촉진법」의 중요성을 강조함.
- 사회 부문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시행 중인 △교육 △의료 △환경 국가프로그램 진행상황을 검토하고, 2020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를 강조함.
- 복지 부문은 출산 장려와 국민소득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으며, △출산지원금 △보육환경 △저소득층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함.

1)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(2020. 1. 15), "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"(검색일: 2020. 1. 16).
2) 김초롱(2019), 「러시아 2019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」, KIEP 세계경제 포커스, Vol. 2, No. 2, p. 3.
3) Oxford Analytyca(2020. 1. 16), "Russia's Putin clarifies options but not his future"(검색일: 2020. 1. 20).
4) The BELL(2020. 1. 15), "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подало в отставку"(검색일: 2020. 1. 20).
5) Газета.Ru(2020. 1. 21), "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: кто ушел и кто остался"(검색일: 2020. 1. 22).
6) 현재 국가안보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20일 연방 하원에 접수되어 검토 중임.
7) *The Economist*(2020. 1. 16), "Putin proposes a rewrite of Russia's constitution"(검색일: 2020. 1. 21).

2. 2020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

가. 정치 부문

■ 개헌은 2024년 임기가 만료되는 푸틴 대통령의 추후 행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.

- 푸틴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메드베데프 前 총리, 볼로딘 두마의장 등이 언급했던 것과 달리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준비된 결과물임.
- 푸틴 대통령은 개헌 법안을 연두교서 발표 후 연방 하원에 제출했으며, 일부 수정과정을 거친 후 2020년 안에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임.
- 개헌 발표 시기는 예측 불가능했으며, 이로써 푸틴 대통령의 권력 이양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.

■ 이번 연두교서에서 언급된 개헌 및 정치 구조 변화는 향후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, 만일 개헌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된다면 권력구조에 변화가 있을 전망임.

- 푸틴 대통령은 국무위원회(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)[8]의 역할을 헌법에 규정하도록 제안함.[9]
  - ○ 국무위원회는 현행법상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자문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데, 헌법에 역할이 규정될 경우 정부기관으로 승격될 수 있음.
  - ○ 만일 푸틴 대통령이 추후 국무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면,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.
- 푸틴 대통령은 연방 상·하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와 내각 인사 임명 권한을 강화하도록 제안함.
  - ○ 개헌이 통과된다면 연방의회(두마)의 역할이 일부 강화되는 반면,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.
- 푸틴 대통령은 법안 입법 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도록 제안했으나,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완벽하게 법안을 반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.[10]
  - ○ 현행법상 대통령은 14일 내에 법안을 승인하거나 연방의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,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법률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무기한 법안 승인을 회피할 수 있음.

8) 국무위원회는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신설한 자문기구로, 국내 정치 이슈를 논의하는 기관이며, 내각인사, 지역별 지도자, 상·하원 의장, 정당 대표 등 연방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음.
9) РБК(2020. 1. 20), "Путин предложил Госдуме добавить в Конституцию норму о Госсовете"(검색일: 2020. 1. 21).
10)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(2020. 1. 21), "'Зависимость судей от президента увеличится.' Юрист и политолог о том, как поправки Путина изменят работу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"(검색일: 2020. 1. 21).

■ 개헌은 최근 수년간 메드베데프 총리, 볼로딘 두마의장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인사가 자주 언급했으며, 푸틴 대통령은 개헌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음.

-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고위직은 러시아 국적 외에 해외 국적 및 영주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,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25년간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외국 국적과 영주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제안함.
- 특히 대통령직 연임 규정은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, 제81조 3항의 '연속해서'라는 단어를 삭제하도록 제안했으며, 개정 시 앞으로 동일 인물의 대통령직 재임 횟수는 2회로 제한될 것임.
-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헌법을 국제조약, 국제법규, 국제관습법 등의 국제법보다 우선시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.

○ 러시아는 국제법 비준 시 러시아 헌법 충돌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상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제한은 정치적 행보라고 평가됨.[11]

- 푸틴 대통령은 헌법에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해, 전 국민이 최저생계비를 헌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함.

표 1. 정치 부문 주요 변경 내용

구분	주요 변경 내용
국가 운영	· 국무위원회를 정부기관으로 격상 추진 · 상·하원의 총리 임명 및 총리 추천으로 내각 임명 역할 강화 · 대통령 요청 시 헌법재판소에 법안 검토 의무 추가
고위직 자격	· 정부 고위직은 러시아 국적 외 해외 국적 및 영주권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 · 대통령 후보는 35세 이상, 연속해서 러시아 2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 · 대통령 임기는 2회 이상 연임 불가
기타	· 국제법과 충돌 시 러시아 헌법 우위(내용상 변동 없음) ·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헌법으로 보장

자료: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(2020. 1. 15), "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," 언론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.

나. 경제 부문

■ [사업환경] 푸틴 대통령은 재정흑자, 낮은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다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을 강조하며, 투자유치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.

- 러시아 정부는 국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6년간 세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, 이러한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11) РИА Новости(2020. 1. 15), "Революция сверху. Суть предложенных Путиным изменений в Конституцию"(검색일: 2020. 1. 21).

○ 현재 신규 러시아 투자법에 대해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, 빠른 시일 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신규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△사업 초기 조건 보장 △투자보호계약 도입 등이며, 러시아 정부는 신규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2개의 투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법리해석 오류를 개선하고자 함.

- 정부는 도로, 통신 등 인프라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지고, 지방의 중소기업이 보다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○ 러시아 정부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등 재정 투자가 확대되어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면, 다양한 규모의 민간투자도 동시에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- 푸틴 대통령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, 러시아 중앙은행에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정책 마련을 요청함.

■ **[혁신기술] 러시아는 인공지능, 신소재, 신재생에너지, 디지털기술 등의 분야에서 자체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.**

- 러시아 정부는 신기술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빅사이언스를 포함한 과학 장비 및 인프라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임.

○ 연구자들은 최신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, 향후 유능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- 첨단기술 분야의 법제화는 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,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와 의회에 안정적인 법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함.
- 푸틴 대통령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사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 지원과 안정적인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함을 강조함.

표 2. 경제 부문 세부 과제와 주요 내용

분야	세부 과제	주요 내용
사업환경 개선	신규 투자법 재정	· 사업 초기 조건 2년, 3년, 6년 등 투자 분야에 따라 차등 보장 · 「투자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계약(투자보호계약)」[12] 도입
	인프라 구축	· 지방의 도로, 통신 등 인프라 시설 확충 · 재정 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간 교류 활성화 도모
	대출 지원 확대	· 중소기업 대상 대출기준 완화 및 대출 활성화 · 기업 친화적 대출정책 검토 및 추진
혁신기술 활용	재정 투자 확대	· 인공지능, 신소재, 신재생에너지, 빅사이언스 등 인프라 투자 확대 · 인프라 투자 외 연구환경 제고 및 연구자 지원 확대
	법제 확립	· 첨단기술 육성 및 개발을 위한 법제 마련 · 러시아 정부, 전문가, 기업가 등과 협력해 효율적인 법률안 검토
	재정 지원	· 혁신기술 상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 · 스타트업, 벤처기업 실패 시 정부의 구제체계 마련

자료: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(2020. 1. 15), "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" 바탕으로 저자 작성.

12) 투자보호계약은 투자주체인 민간기업과 러시아경제개발부 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, 최대 보장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, 계약기간 동안 정부는 해당 기업에 동일한 조세·행정 조건을 보장함. 김초롱(2019), 「러시아, 투자 촉진 및 투자자 보호법 신설 추진」, KIEP 지역연구공동 동향세미나, 제18호.

다. 사회 부문

■ [교육] 러시아 인구 증가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바, 푸틴 대통령은 학교 시설과 모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고, 모든 학생이 첨단기술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개선을 촉구함.

- 러시아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초고속 인터넷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학교에 접목하고자 함.

○ 현재 러시아 학교는 시설 정비와 초고속 인터넷 연결 등이 필요한 상태임.

- 러시아 정부는 예술학교에 악기를 비롯한 필수 기자재 구입을 위해 약 80억 루블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으나, 대부분의 학교는 악기 구입 외에 시설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.

○ 푸틴 대통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낙후된 학교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.

- 현재 러시아는 지역별로 교사, 의사, 엔지니어 등 전문직 인재 수 편차가 큰 편이며,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지방대학의 입학정원과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함.
- 푸틴 대통령은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, 학생들이 2학년 진급 전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함.

○ 러시아 정부가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시작한 '러시아는 가능성의 나라' 사업에는 이미 350만 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, 향후 변화하는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유연하게 운영체계를 변경할 예정임.

■ [의료] 푸틴 4기 정부는 의료 분야 국가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, △1차 의료체계 구축 △의료시설 현대화 △의료진 재교육 △의료진 임금·복지 개선 등 다방면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임.

- 러시아의 1차 보건의료시설은 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임.

○ 러시아 정부는 의료 분야 국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1차 보건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고, 국민의 의료 및 건강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임.

- 2020년 7월부터 러시아 중앙정부는 낙후된 의료시설 재정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5,500억 루블을 지원할 예정임.

○ 지방정부는 의료환경 개선과 더불어 기숙사, 사택 지원 등의 형태로 의료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.

- '필수의약품 지급대상자 통합목록'은 2020년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이며,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구축되어 추후 필수 의약품 수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정비될 것임.

○ 2019년 초 정부 의약품 담당부서의 과실로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일부 환자에게 필수 의약품이 제공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음.

표 3. 사회 부문 세부 과제와 주요 내용

분야	세부 과제	주요 내용
교육	첨단기술 접목	· 전국 모든 학교 초고속 인터넷 연결 · 교내 첨단기술 활용 가능 환경 조성
	예술학교 지원	· 문화 분야 국가프로그램 예산으로 악기 구입 지원 · 시설 정비를 위해 추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정
	대학 운영방식 개선	· 지역별 수요에 맞춰 지방대학의 전문직 입학정원 및 장학금 확대 · 2학년 진급 전 세부 전공 선택 가능하도록 교육제도 개편
의료	1차 의료체계 구축	·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차 보건의료시설 확충 · 1차 보건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고
	의료환경 개선	· 2020년 7월 추가예산 편성 예정 · 의료시설 보수 및 의료진 주거문제 해결
	필수의약품 관리 강화	· '필수의약품 지급대상자 통합목록' 구축 및 시범운영 예정 · 의약품 목록, 의약품별 중앙·지방 정부 지원 비율, 환자 목록 등 관리

자료: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(2020. 1. 15), "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" 바탕으로 저자 작성.

라. 복지 부문

■ [출산 장려] 러시아는 2007년 '출산지원금(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)'을 처음 도입해 출산율이 2007년 1.42%에서 2019년 1.75%까지 증가하는 데 성공했지만,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가 완화되어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
- 저소득층의 육아지원금은 지역별·연령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 해당 지역의 물가를 반영해 지원 금액이 점진적으로 증액될 예정임.

○ 저소득층 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가계소득이 2인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해당되며, 기존에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던 지원금 지급 월령은 36개월까지 연장됨.

○ 푸틴 대통령은 총 가계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족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 지급 연령을 현행 3세에서 7세로 연장해,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부모가 적극적으로 육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함.

- 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둘째와 셋째 출산·입양 시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정부지원금으로, 지원 금액·대상·기한 등이 변경됨.

○ 출산지원금 지급정책은 러시아 정부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,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.

○ 푸틴 대통령은 현행 둘째 출산·입양 시부터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확대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, 둘째 지원금은 15만 루블 증액, 셋째 지원금은 45만 루블 규모의 주택대출금 상환 형태로 지원하기로 함.

- 러시아 정부는 취업·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'사회적 계약(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)'[13]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며,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, 해당 사업을 2021년까지 러시아 전역에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■ [아동복지] 러시아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정책과 더불어 보육정책을 추진 중이며, 푸틴 4기 정부는 △보육시설 증원 △시설 현대화 △보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도모하고 있음.

- 보육시설 확충 문제는 2018년부터 지역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었으나, 현재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.

○ 정부는 2021년 말까지 총 25만 5,000자리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나, 지난 2년간 7만 8,000자리 확충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, 그마저도 그중 절반은 필수 보육기관 인증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아직 기능을 못하고 있음.

- 푸틴 대통령은 1~4학년[14]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.

○ 무료급식 지원은 현재 급식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2020년 9월 학기부터 시작해서, 2023년 9월 학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.

표 4. 복지 부문 세부 과제와 주요 내용

분야	세부 과제	주요 내용
출산 장려	저소득 가정 지원 강화	· 지원 대상은 총 가계소득이 2인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정 · 총 가계소득 기준으로 2인 최저생계비 미달 가정에는 0~18개월, 1인 최저생계비 미달 가정에는 0~7세까지 지원 예정
	출산지원금 증액	· 첫째 출산·입양 시 기존 둘째 출산지원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[15] · 둘째 출산·입양 시 15만 루블 추가 지원 · 셋째 출산·입양 시 주택담보대출 상환(최대한도 45만 루블)
	'사회적 계약' 확산	·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, 2021년까지 전국 확대 시행 예정 · 체계적인 취업·창업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독립 희망
아동복지	보육환경 개선	· 보육시설 확충 목표 미달,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력 필요 · 2021년까지 총 25만 5,000자리 확보 목표
	무료급식 지원	· 초등학생 무료급식 지원 제안, 2023년 9월 전국 확대 목표 · 급식소 시설 현대화를 위한 추가예산 편성 필요

자료: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(2020. 1. 15), "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" 바탕으로 저자 작성.

13) '사회적 계약(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)'은 정부와 개인 간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으로써 정부는 개인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개인은 교육, 구직, 창업 등을 하는 구조임. Карелова Г. Н(2019), "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,"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Блоги Сенаторов. http://council.gov.ru/services/discussions/blogs/104288/(검색일: 2020. 1. 21).
14) 러시아의 교육체계는 초등과정(1~4학년), 중등과정(5~9학년), 고등과정(10~11학년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11년제임.
15) 2020년 기준 약 46만 루블임.

3. 시사점

■ 2020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개헌 문제를 언급함과 동시에 사회·복지 부문의 내용이 강조되었다는 데 주요한 특징이 있음.

- 푸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2021년 총선, 2024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연두교서에서 국내 사회 및 경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임.

○ 특히 푸틴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 소득 향상 문제를 언급했으며, 이번 연두교서에서 △출산·육아지원금 인상 △교사·의사·공무원 임금 인상 △민간 대출기준 완화 등의 정책을 강조함.

○ 러시아는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으며, 낮은 물가상승률, 낮은 실업률, 낮은 부채비율 등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, 가계소비가 둔화되고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.

- 러시아 정부는 현재 러시아 경제의 문제를 국가프로그램에 계획된 대규모 재정투자와 혁신기술 육성 및 도입을 통해 타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, 경제제재 국면 지속과 국제유가 변동 등 구조적인 문제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- 푸틴 대통령이 △국무위원회 격상 △상·하원 역할 강화 △대통령 후보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제안한 것은 임기 만료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됨.

■ 한국정부는 한·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 분야와 신사업 발굴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.

- 이번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국가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요청한 점을 감안할 때, 한·러 지방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○ 지방 협력은 각 지역별 강점과 지리적 특색을 고려해 협력 분야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며, 양국의 지방간 문화 교류와 더불어 경제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.

-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, 첨단기술, 빅사이언스, 디지털경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 전문가간 교류를 강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해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.
- 러시아 정부는 의료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바, 한국은 첨단 의료기술과 더불어 의료서비스, 진료기록 전산화 등의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에 협력사업을 제안해볼 수 있음. KIEP

[부록]

부록 표. 러시아 신내각의 인사 변동 현황

직책	변경 전	변경 후
총리	· 드미트리 메드베데프	· 미하일 미슈스틴(전 연방국세청장)
제1부총리	· 안톤 실루아노프	· 안드레이 벨로우소프(전 대통령 경제보좌관)
부총리 (9명 → 8명)	· 콘스타틴 추이첸코 · 유리 트루트녜프 · 유리 보리소프 · 타티아나 골리코바 · 올가 골로데츠 · 드리트리 코작 · 비탈리 무트코 · 막심 아키모프 · 알렉세이 고르데예프	· 드미트리 그리고렌코(전 연방국세청 차장) · 유리 트루트녜프(*)(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겸직) · 유리 보리소프(*) · 타티아나 골리코바(*) · 마라트 후스눌린(전 모스크바시 부시장) · 알렉세이 오베르추크(전 연방국세청 차장) · 드미트리 체르니신코(전 가스프롬미디어 사장) · 빅토리아 아브람첸코(전 경제개발부 차관 겸 연방 국가등록처장)
외무부장관(*)	· 세르게이 라브로프(2004년 ~)	
재무부장관(*)	· 안톤 실루아노프(2011년 ~ , 2018년 5월 ~ 2020년 1월 제1부총리 겸직)	
국방부장관(*)	· 세르게이 쇼이구(2012년 ~)	
내무부장관(*)	·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(2012년 ~)	
에너지부장관(*)	· 알렉산드르 노박(2012년 ~)	
산업통상부장관(*)	· 데니스 만투로프(2012년 ~)	
교통부장관(*)	· 에브게니 디트리흐(2018년 ~)	
환경부장관(*)	· 드리트리 코빌킨(2018년 ~)	
농업부장관(*)	· 드미트리 파트루셰프(2018년 ~)	
건설부장관(*)	· 블라디미르 야쿠셰프(2018년 ~)	
극동·북극개발부장관(*)	· 알렉산드르 코즐로프(2018년 ~)	
비상사태부장관(*)	· 예브게니 지니체프(2018년 ~)	
문화부장관	· 블라디미르 메딘스키	· 올가 류비모바(전 문화부 영화국 국장)
디지털발전·통신·미디어부장관	· 콘스탄틴 노스코프	· 막수트 샤다예프(전 로스텔레콤 부사장)
보건부장관	· 베로니카 스크보르초바	· 미하일 무라시코(전 연방보건감독청장)

교육부장관	· 올가 바실리예바	· 세르게이 크라프쵸프(전 연방교육감독청장)
과학·고등교육부장관	· 미하일 코튜코프	· 발레리 팔리코프(전 튜멘국립대학교 총장)
체육부장관	· 파벨 콜로브코프	· 올렉 마티친(전 연방대학체육협회장)
노동복지부장관	· 막심 토필린	· 안톤 코탸코프(전 재무부 차관)
경재개발부장관	· 막심 오레시킨	· 막심 레셰트니코프(전 페름주지사)
법무부장관	·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	· 콘스탄틴 추이첸코(전 부총리)
북카프카스부장관	· 세르게이 체보타예프	(폐지)

주: (*)으로 표시한 부분은 연임된 인사임.
자료: 언론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.